

■ 특집 ■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Vertreibung und Flucht)

: 독일인 희생자 담론과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신정훈

I. 머리말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침략을 통해 강탈했던 지역을 모두 잃은 것은 물론, 1919년 베르사유 조약(Friedensvertrag von Versailles)에 의해 이미 축소되었던 영토마저 온전히 보전할 수 없는 처지였다. 소련과 미국, 영국 정상들은 1945년 8월 2일 체결된 포츠담 협정(Potsdamer Abkommen)을 통해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Linie)을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새로운 경계로 정하여, 1937년 당시 독일제국 (Deutsches Reich) 면적의 약 1/4을 차지했던 동방영토 (Ostgebiete)¹⁾를 폴란드와 소련에게 할양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독일과 폴란드 국경의 최종적인 확정을 추후로 예정된 평화회의 때까지 유보함으로써 장차 영토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오데르-나이세 선 구획에 이어 연합국들은 ‘동방영토’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과 동·중부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계 주민들을 오데르-나이세 선 이서(以西) 지역으로

1)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동방영토는 동프로이센(Ostpommern), 동포메른(Ost-Pommern), 동브란덴부르크(Ost-Brandenburg), 슐레지엔(Schlesien) 지역을 의미했다.

이주시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독일인들을 소 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족 간 갈등을 영구히 제거하려 하였다.²⁾ 그런데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以東) 지역의 독일인들은 1944년 가을 이미 소련군의 동진을 피해 오데르강 서안으로 상당수가 피신해 있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지만 1945년 7월 오데르-나이세 선을 통제하던 소련군과 폴란드 당국에 의해 귀향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국들이 그들의 이주 계획을 결정한 것은 소련과 폴란드의 행위를 추인해준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 출신 독일인들의 규모는 1950년을 기준으로 동서독과 오스트리아를 합쳐 약 1200만 명(서독: 790만, 동독: 410만, 오스트리아: 37만)에 달하였다.³⁾ 포츠담 협정은 동·중부유럽 거주 독일인들이 “질서정연하고 인도주의적인 방식(in ordnungsgemäßer und humaner Weise)”으로 “이송(Überführung)”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피난(Flucht)’과 ‘추방(Vertreibung)’이란 용어로 명명된 강제이주 과정에서 독일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쟁 당시 소련군뿐만 아니라 과거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은 동·중부유럽인들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난’과 ‘추방’ 이후 서독에 정착한 동·중부유럽 출신 독일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빈민과 실업자로 전락해 있었다. 난민(Flüchtling) 또는 실향민(Vertriebene)⁴⁾으로 불린 이들은 1950년 당시 서독에서만 약 790만

2) Wolfgang Benz, ed.,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Ursachen, Ereignisse, Folgen* (Frankfurt am Main: Fischer, 1988), p. 8

3) Arnd Bauerkämper, “Deutsche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aus Ost-, Ostmittel- und Südosteuropa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se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Klaus J. Bade, Pieter C. Emmer, Leo Lucassen & Jochen Oltmer, eds., *Enzyklopädie Migration in Europa: Vom 17.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07), p. 478.

4) Vertriebene의 직접적 의미는 ‘추방된 자’이며, 이 용어에는 고향을 상실한 동방영토 주민들의 희생과 이들을 추방한 동구권에 대한 반공주의적인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역사적 의미로서의 한국의 ‘실향민’이란 단어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실향민’이란 용어에도 Vertriebene란 단어와 같이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고향을 잃었다는 반공주의적 인식이 숨어

명에 달했으며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주했기 때문에 당장에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 서독 주민들 집에 얹혀 살거나 철판으로 이루어진 반원형 막사(Nissenhütte)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독 주민들로부터 나치의 동조자들 혹은 부랑자 취급을 받았으며,⁵⁾ 더 나아가 같은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간주되며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는 서구(Westen)의 ‘동부 지역(Osten)’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적 시선뿐만 아니라 나치 시대 이 지역 출신들을 ‘열등인종(Untermensch)’으로 취급했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⁶⁾

실향민들이 경험한 ‘피난’과 ‘추방’에 대한 논의는 사회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였으며 일상에서도 터부시되었다. 이는 1950년대까지 전쟁이라는 참혹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침묵하려 했던 정서가 유럽사회를 지배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독일인들의 ‘추방’을 결정한 당사자 중의 한명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1946년 9월 19일 취리히 대학의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참혹한 경험들로부터 등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이 끝없는 불행과 진정으로 궁극적 파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 과거의 모든 범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망각

있기 때문이다. Matthias Stickler, “Ostdeutsch heißt Gesamtdeutsch”: *Organisation, Selbstverständnis und heimatpolitische Zielsetzungen der deutschen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2* (Düsseldorf: Droste, 2004), pp. 9-1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91-394쪽 참조. 한편,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이하 동독)에서는 소련에 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실향민’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이주자(Umsiedler)’ 또는 ‘새로운 시민(Neubürger)’만 있을 뿐이었다. Arnd Bauerkämper, “Deutsche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aus Ost-, Ostmittel- und Südosteuropa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se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p. 483. 동독의 ‘이주민정책(Umsiedlerpolitik)’과 통합과정은 Michael Schwartz, Vertriebene und “Umsiedlerpolitik”: *Integrationskonflikte in den 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en und die Assimilationsstrategien in der SBZ/DDR 1945-1961*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4)를 참조.

5) Andreas Kossert, *Kalte Heimat: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Vertriebenen nach 1945* (München: Siedler, 2008), p. 12.

6) *Ibid.*, p. 71.

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독일 사회 역시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국가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⁸⁾ 다만, 서독의 전후 복구 사업 가운데 극심한 빈곤과 차별을 겪는 실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회통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난’과 ‘추방’이란 이슈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동방영토 수복이라는 외교적 ‘재건’ 과제도 남아 있었다.⁹⁾ 이러한 정책적 목표 앞에서 실항민들은 ‘전쟁 희생자(Kriegsopfer)’로 간주되었으며 ‘독일인 희생자 담론(deutscher Opferdiskurs)’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희생자 담론은 실항민부(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에서 기획한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의 출판으로 이어졌으며 이 『자료집』은 서독 초기에 ‘추방’과 ‘피난’의 기억을 공식적으로 다룬 결과물로서 독일인 희생자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추방’과 ‘피난’의 기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동서독 통일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희생의 기억’ 또는 ‘희생서사(Opfererzählung)’가 통일 이전 시기에 얼마나 대중적 관심을 받았는지

7) Winston Churchill, 1946, “Churchill’s speech in Zurich”, https://www.churchill-in-zurich.ch/site/assets/files/1807/rede_winston_churchill_englisch.pdf (검색일: 2021년 1월 25일), p. 2.

8) Aleida Assmann, 2016, “Erinnerung an Flucht und Vertreib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uploads/2016/06/vortrag_aleida_assmann_heinrich-boell-stiftung_flucht_und_vertreibung.pdf (검색일: 2019년 8월 29일), pp. 4-5; Arnd Bauerkämper, *Das umstrittene Gedächtnis. Die Erinnerung an Nationalsozialismus, Faschismus und Krieg in Europa seit 1945*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2), p. 372; Constantin Goschler, “‘Versöhnung’ und ‘Viktimisierung’: Die Vertriebenen und der deutsche Opferdiskurs”,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 53(2005), pp. 874-877.

9) Bernd Faulenbach, “Flucht und Vertreibung in der individuell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Erinnerung”, *BIOS*, 21(2008), p. 107; Kossert, *Kalte Heimat*, p. 87.

에 맞추어져 있었다.¹⁰⁾ 독일인 희생자 담론이 냉전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에서의 반공주의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주요 논점이 아니었으며 담론에 직접 개입한 ‘희생 당사자’로서의 실향민 단체들(Vertriebenenverbände)의 역할도 이러한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서독의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한 희생자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의 역할과 더불어 실향민 단체들이 그것에 기여한 바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추방’과 ‘피난’이라고 명명된,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독일인 강제이주가 통일 이전 서독의 기억 문화와 반공주의의 맥락 아래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향민 단체들이 반공주의를 도구로 하여 시도한 ‘자기희생자화(Selbstviktimisierung)’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서독의 주요 정당들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성립 직후 냉전 체제 하에서 동방영토 상실과 실향민문제(Vertriebenenfrage)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의 편찬 배경과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독일인 희생서사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자료집』의 영향을 받은 영화 <고텐하펜에 밤이 내렸다(Nacht fiel über Gotenhafen)>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당대 대중문화에 남겨진 독일인 희생자 담론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익단체로서의 실향민 단체들과 관련 언론이 스스로 내세운 ‘희생서사’를 관찰시키기 위해 『자료집』 저자들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10) 이와 관련해서는 R. M. Douglas & Martin Richter (Übersetzer), “*Ordnungsgemäße Überführung*”: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München: C.H.Beck, 2012), pp. 430-434 참조.

II.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서독 정치권에서의 '독일인 희생자' 담론

1949년 9월 20일 독일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기민련) 소속의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는 연방의회에서의 정부연설(Regierungserklärung)을 통해서 실항민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실항민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백만 명씩 사망한 실항민들의 운명”이란 말을 통해 사실상 그들이 ‘전쟁 희생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그는 동방영토 상실과 추방에 대한 책임을 포츠담 협정에 공동서명한 미국과 영국 정부에게는 묻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을 소련과 폴란드에 전가하였다.¹¹⁾

아데나워를 비롯한 서독의 유력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포츠담 협정과 실항민문제에 초당파적으로 접근하였다.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이하 자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독일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는 1949년 9월 12일 연방의회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체(Staatsform)’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수백만 명의 고향 없는 자들의 끔찍한 국내 이주(furchtbare Binnenwanderung)”를 계기로 “향우회(Landsmannschaft) 개념”이 독일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¹²⁾ 여기서 말하는 향우회는 실항민들이 자신들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추방’ 이후 실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호이스는 실항민들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고향인 ‘동방영토’ 역시 독일이란 국체의 일부임을 시사하였다. 그에게 있어 ‘독일 동부 지역(der deutsche Osten)’은 단순히 ‘곡창지대’나 ‘감자밭’이 아니

11) Konrad Adenau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der 5. Sitzung, Plenarprotokoll*, 01/5(20. September 1949), p. 22, pp. 28-29.

12) Theodor Heuss, “Ansprache des Bundespräsidenten”,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der 2. Sitzung, Plenarprotokoll*, 01/2(12. September 1949), pp. 10-11.

라 ‘독일인들의 고향’이었다.¹³⁾

전후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당)의 당 대표이자 서프로이센(Westpreußen) 출신이기도 했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는 나치 정권에 강력히 저항했던 인물임에도, 동방영토 문제에서 반공주의적이면서도 영토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는 1945년 10월 쾰른에서의 대중 연설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이 국경선(오데르-나이세 선) 저편 독일의 모든 제곱미터 땅을 얻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¹⁴⁾ 슈마허의 이러한 비타협적인 입장을 토대로 사민당은 ‘전쟁 없는 영토 수정주의’ 노선을 공고히 하였다.¹⁵⁾ 이처럼 단호한 영토 수복 의지를 내비친 슈마허는 기본적으로 전후 처리가 독일에게 매우 가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다. 1947년 전당대회에서 그는 “독일이 이미 적절하게 산정된 청구액보다 더 많은 피해 배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배상의 사례로 “1300만 실항민들”로부터의 “약탈품”과 “독일 영토의 상실”을 지적하였다.¹⁶⁾ 이처럼 슈마허는 서독 초기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실항민들의 ‘희생자성(Opfertum)’과 독일이 입은 피해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들 중의 한명이었다.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1949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에서 오데르-나이세 선을 ‘평화선(Friedensgrenze)’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는 당대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¹⁷⁾ 영토 수정주의를 거부하는 공산당의 입장

13) *Ibid.*

14) Helmut Bärwald, *Kurt Schumacher: Arbeitshilfe Nr. 64 (Bonn: Pfenningberg, 1995), pp. 13-14, Matthias Müller, Die SPD und die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7: Eintracht, Entfremdung, Zwietracht (Berlin: Lit Verlag, 2012), p. 33에서 재인용.*

15) *Ibid.*, pp. 44-45.

16) Kurt Schumacher, “Deutschland und Europa”,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vom 29.6. bis 2.7.1947 in Nürnberg*, pp. 44-45.

17) “Bundestagswahlprogramm der KPD 1949”, Günter Judick, Josef Schleifstein & Kurt Steinhaus, eds., *KPD 1945-1968: Dokumente*, Bd.

은 서독의 다른 정당들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조차 실항민들의 ‘희생자 지위(Opferstatus)’를 부정할 수 없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실항민들이 추방당함으로써 재산을 잃고 빈곤상태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였다.¹⁸⁾ 다만, 공산당은 실항민을 ‘이주자(Umsiedler)’ 혹은 난민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소련이 가담했던 ‘추방’과 그들을 연관 짓지 않으려 하였으며 어디까지나 그들을 ‘히틀러 전쟁의 희생자(Opfer des Hitlerkrieges)’로 간주하였다.¹⁹⁾ 공산당은 실항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전쟁부담을 조정(Lastenausgleich)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것을 위한 재원 마련은 토지개혁과 전쟁·나치 범죄자, 통화개혁의 수혜자의 재산 몰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 실항민들의 상황이 서독을 공산화시키려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공산당은 실항민들을 다른 ‘나치범죄정책 희생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자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²⁰⁾

실항민들의 ‘희생자화’ 과정에는 실항민 출신 연방의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비율은 연방의회에서 1949년에서 1976년까지 평균적으로 8퍼센트에서 12퍼센트 사이를 오갔다.²¹⁾ 실항민 정치인들은 우선적으로 각자가 속한 정당에 정치적인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지역적인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그들의 출신지역은 너무도 다양하고 넓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중부유럽 지역 출신 독일인들이 ‘피난’과 ‘추방’ 때문에 사회적 계층 하락을 겪

1 (Neuss: Edition Marxische Blätter, 1989), p. 291.

18) Michael Schwartz, “Vertriebene im doppelten Deutschland: Integrations- und Erinnerungspolitik in der DDR und in der Bundesrepublik”,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6(2008), pp. 119-120.

19) “Bundestagswahlprogramm der KPD 1949”, p. 293.

20) Schwartz, “Vertriebene im doppelten Deutschland”, p. 120; “Erklärung des PV der KPD zur politischen Lage”, *KPD 1945-1968: Dokumente*, Bd. 1, p. 227, pp. 243-245.

21) Wolfgang Fischer, *Heimat-Politiker?: Selbstverständnis und politisches Handeln von Vertriebenen als Abgeordnete im Deutschen Bundestag 1949-1974* (Düsseldorf: Droste Verlag, 2010), p. 66.

었다는 집단 고유의 의식(kollektives Sonderbewusstsein)을 공유하였고, 이 때문에 스스로를 세계 대전의 희생자로 여겼다. 이러한 ‘집단의식’을 토대로 실향민 정치인들은 실향민 정책에서 초당파적인 의사결정자이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실향민들이 피난과 추방을 통해서 입었던 재산상의 손실 보전을 규정한 전쟁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과 실향민들의 서독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연방 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제정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실향민의 이해를 대변하였다.²²⁾

이처럼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서독 정치인들은 정당과 이념을 막론하고,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실향민들을 전쟁의 희생자로 보았다.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독일인 희생자’ 담론을 통하여 소련의 전쟁 범죄와 독일에 부과된 과도한 처벌을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실향민을 나치정권 피해자와 비교함으로써 양 집단 사이에는 소위 ‘희생자 경쟁(Opferkonkurrenz)’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집단을 위한 보상안들이 논의되었고, 실제 1952년에는 실향민을 위한 전쟁부담조정법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한 룩셈부르크 조약(Luxemburger Abkommen)도 체결되었다. 1953년 3월 18일 연방의회에서 룩셈부르크 조약 비준과 실향민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의 ‘희생자성’이 부각되었고, 실향민들도 유대인들처럼 ‘민족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졌다.²⁴⁾ 사민당 소속의 실향민 의원인 리하르트 라이츠너(Richard Reitzner)는 “실향민들의 운명은, 특정 민족 소속(Volkszugehörigkeit)이란 이유로 그리고 패배한 히틀러 전쟁을 이유로 책임을 떠안은 집단의 운명”이라고 강

22) *Ibid.*, pp. 137-138, pp. 172-173, p. 255.

23) Constantin Goschler, *Wiedergutmachung: Westdeutschland und die Verfolgten des Nationalsozialismus 1945-1954*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1992), pp. 202-203.

24) Robert G. Moeller,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1-1(1996), pp. 1016-1017.

조하였다.²⁵⁾ 실항민들이 겪은 ‘피난’과 ‘추방’은 전쟁 책임의 대가로서 독일민족(deutsches Volkstum)에게 가해진 일종의 ‘박해’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초반 실항민과 유대인 희생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는 마련되었지만, 국가 재건을 위한 ‘망각’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홀로코스트’와 ‘추방’ 문제 모두 서독의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비로소 1980년대에 유대인절멸에 대한 기억이 폭넓게 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인 강제이주와 관련된 기억은 그보다 더 늦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광범위한 전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²⁶⁾ 다만, 서독 초기부터 ‘독일인의 희생’에 대한 초당파적인 정치적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인 희생자’ 담론은 적어도 ‘위로부터’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는 실항민들의 피해 경험담을 직접 수집·보존하여 이들의 ‘희생서사’ 만들기에 직접 개입하였다.

Ⅲ.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 과 독일인 ‘희생서사’의 시작

아테나워 총리는 첫 정부연설에서 ‘추방’에 관한 모든 법적, 사실관계 자료를 진정서의 형태로 만들어 연합국 측에 제공하는 계획을 공언한 바 있었다.²⁷⁾ 이러한 계획의 결과물이 바로 실항민부에서 출판한 『동·중부 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이하 『자료집』)이었다. 『자료집』 편찬 사업은 서독 초기 저명한 역사학자인 테오도르 쉬더(Theodor Schieder)²⁸⁾의 주도 하에 1951년에서 1961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진행

25)Richard Reitzner, “Rede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der 254. Sitzung, Plenarprotokoll 01/254*(18. März 1953) p. 12236.

26)Assmann, “Erinnerung an Flucht und Vertreib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p. 6.

27)Adenau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p. 29.

28)쉬더는 독일의 사회사와 구조사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학자

되었다.²⁹⁾ 이 사업에 의해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총 다섯 편의 본편과 세 편의 별책으로 구성되어 출간된 『자료집』은 기본적으로 실향민들의 구술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책의 서문에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현재의 폴란드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주변)과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 살았던 독일인 인구 현황을 집적하고, 실향민들의 구술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추방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³⁰⁾

였지만, 1945년 이전 '동유럽연구(Ostforschung)'를 통해 나치 팽창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역사가로도 유명하다. 그와 관련된 논쟁은 송충기, 「역사학과 과거청산: 나치시대 역사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구사학』, 제80권(2005) 참조

29) 이 프로젝트의 위상은 그것에 참가한 주요 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58년에서 1962년까지 독일 역사가 협회장을 역임했던 한스 로스펠스(Hans Rothfels), 쾰른대 철학부 학장을 지낸 페터 라쾰브(Peter Ras-sow), 1972년에서 1976년까지 독일 역사가 협회장을 맡았던 베르너 콘체(Werner Conze)와 같이 권위 있는 역사가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더불어 당시 젊은 세대에 속했던, 뮌헨 현대사 연구소장을 지낸 마르틴 브로샤트(Martin Broszat), 빌레헬트 학과의 창립자들 중의 한 명인 한스 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도 이 계획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구성한 학술위원회(Wissenschaftliche Kommission)가 『자료집』 전체의 편집과 서문의 서술방향을 결정하였다. Mathias Beer,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Das Großforschungsprojekt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46(1998), pp. 345-353 참조.

30)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Bd. I, 1-3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Ungarn*, Bd. II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Rumänien*, Bd. III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Bd. IV, 1-2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Jugoslawien*, Bd. V (München: dtv, 1984);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ommern 1945-46, Aufzeichnungen von Käthe von Nor-mann*, 1.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55);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rag 1945-46, Aufzeichnungen von Margarete Schell*, 2. Beiheft (Bonn: Bundesminis-

이 총서는 포츠담 협정에서 예정된 평화회의에서 오테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에서 발생한 비인도주의적인 추방의 실상을 연합국 측에 알리고, 독일 실항민들의 ‘고향 땅에서 살 권리(Recht auf die Heimat 이하 고향권)’를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었다.³¹⁾ 오테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을 다룬 첫 번째 편에서는 실항민들의 ‘희생자성’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해당 지역에서 ‘피난’과 ‘추방’에 의해 사망한 독일인들의 수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약 200만 명에 달하였다. 이 숫자는 전쟁말기 이 지역의 독일인구 추정치에서 1950년 동서독에서 살았던 실항민들의 숫자를 제한 값이었다.³²⁾ 이러한 산술적 계산에 의해 정해진 희생자 수는 사실상 신뢰하기 어려웠는데, 교회에 의해 설립된 ‘교계실종자조사협회(Kirchlicher Suchdienst)’의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피난’과 ‘추방’에 따른 사망자는 47만 3013명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희생자 수 부풀리기’는 당대의 반공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독 재무장과 주권회복 문제가 대두되며 반공주의가 한창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료집』 프로젝트는 소련을 비판하는 프로파간다 성격을 띠게 되었다.³³⁾

『자료집』은 본편 전체에 걸쳐 ‘추방’과 ‘피난’ 당시 독일인에게 가해진

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57); *id.*,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Bericht aus Ost- und Westpreußen 1945-1947, Aufzeichnungen von Hans Graf von Lehndorff*, 3.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60).

31) Beer,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pp. 360-368.

32) 피난 이전에 사망한 해당 지역 출신 군인들, 폭격 희생자와 1950년 당시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있던 독일인들의 숫자도 제외하였다.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p. 158 E-160 E.

33) Ingo Haar, “‘Bevölkerungsbilanzen’ und ‘Vertreibungsverluste’: Zur Wissenschaftsgeschichte der deutschen Opferangaben aus Flucht und Vertreibung”, Josef Ehmer, Ursula Ferdinand & Jürgen Reulecke, eds., *Herausforderung Bevölkerung: Zu Entwicklungen des modernen Denkens über die Bevölkerung vor, im und nach dem „Dritten Reich“*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p. 272, p. 277.

소련군과 동유럽 파르티잔들의 성폭행, 살해, 약탈 등 전쟁 범죄를 조명하고 있으며, 소련으로의 ‘유형(Deportation)’과 ‘전쟁 배상 조치(Reparationsmaßnahmen)’로서의 강제노동과 재산몰수 등도 다루었다. 독일 실항민들은 소련군과 동유럽인들로부터 자의적, 체계적 보복을 당하며 동구권이 불세비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동시에 겪은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러한 ‘희생서사’에서 독일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운 소련군과 동유럽인들도 일부 등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차원에 머무르는 것이었다.³⁴⁾ 이 본편 가운데 대다수의 실항민들이 살았던 ‘오데르-나이세선 이동 지역’과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다룬 편들에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특히, 전자에서는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주된 원인을 복수심에서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소련군의 전쟁 범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소련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문제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한 전통과 관념’을 들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여성을 승자의 전리품’으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몇몇 실항민들의 경험담에 근거하여 아시아 출신 군인들에게서 ‘일종의 아시아적 정서(gewisse Züge asiatischer Mentalität)’, 즉, ‘무절제함(Maßlosigkeit)’과 ‘야만성(Wildheit)’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자료집』에서 드러난 이러한 반공주의는 아테나워 시대 기독교민주주의자와 실항민들 사이에서 퍼져있었던 ‘반아시아·반러시아적’ 반공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악셀 쉴트(Axel Schildt)가 지적한대로 이 같은 반공주의는 1950년대 서독 사회에서 매우 번성하였다.³⁶⁾

34)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 65 E, p. 86 E, p. 91 E, p. 104 E;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pp. 111-112.

35)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 61 E.

36) Axel Schildt, “Antikommunismus von Hitler zu Adenauer”, Norbert Frei & Dominik Rigoll eds., *Der Antikommunismus in seiner Epoche: Weltanschauung und Politik in Deutschland, Europa und den USA* (Göttingen: Wallstein. 2017), pp. 193-194.

이처럼 『자료집』은 당대의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범죄를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추방’과 ‘피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나치의 침략과 전쟁 범죄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 편에서 나치에 대한 비판은 단지 전쟁 말기 피난과정에서 독일 주민들을 적절한 때에 철수시키지 않았던 당 기구의 오판에 한정되었다. 반대로, 지역행정조직과 국방군은 피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했던 것으로 기술하였다.³⁷⁾ 당과 다른 국가기구들을 분리함으로써 국방군을 사실상 피난민의 ‘수호자’로 여겼으며, 독일군은 침략자인 적군을 상대로 독일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난민들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인들은 철저히 ‘희생자’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소련과 동유럽 ‘가해자’들의 ‘잔학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추방’과 ‘피난’ 과정에서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는 나치의 전쟁 범죄와 자주 동일시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³⁹⁾

『자료집』 편찬 프로젝트는 첫 번째 편인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 편 출간 이후 나치 과거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지나치게 반공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 때문에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편에서 원색적인 반공주의는 일부 완화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에 나치즘이 동유럽의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던 국외 독일인들(Volksdeutsche)에게 미친 영향이나, 그 이후 나치 정권이 이들을 무장친위대(Waffen-SS)로 징집했던 사실이 기술되었다.⁴⁰⁾ 더 나아가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쉬더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치 과거사 정리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대두된 학문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보고

37)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pp. 12 E-13 E, pp. 25 E-26 E.

38) *Ibid.*, p. 14 E, p. 18 E, pp. 36 E-37 E, p. 45 E.

39) *Ibid.*, p. 133 E, p. 138 E;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pp. 70-71, p. 79.

40)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Ungarn*, pp. 18 E-34 E;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Rumänien*, pp. 27 E-58 E;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Jugoslawien*, pp. 27 E-75 E.

서의 출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⁴¹⁾ 이렇듯 정부와 학자 간의 갈등 속에서 『자료집』은 부분적으로 나치의 국외 독일인에 대한 ‘민족정책(NS-Volkstumspolitik)’을 언급함에 따라, 평화회의에서 ‘추방’의 실상을 고발하는 역사적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애초의 정치적 목적과 상당부분 어긋나게 되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평화회의가 열리지 않자 『자료집』을 활용할 기회조차 없게 되었다. 다소 모호한 결과물로 남게 된 『자료집』은 본래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대중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⁴²⁾ 다만, 서독 초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방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전쟁가해국의 국민으로서 드러내기 어려웠던 ‘피해’의 기억들을 일찍이 집적함으로써 당대의 ‘독일인 희생서사’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⁴³⁾

『자료집』의 영향은 1960년에 상연된 〈고텐하펜에 밤이 내렸다〉⁴⁴⁾라는 영화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나치의 여가단체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의 여객선으로,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군병원선이자 난민대피선으로 활용된 빌헬름 구스틀로프(Wilhelm Gustloff)호가 1945년 1월 30일 발트해에서 소련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동프로이센(Ostpreußen) 출신 프랑크 비스바르(Frank Wisbar)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생존자들의 증언들과 더불어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

41) Beer,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pp. 378-385. 『자료집』 편찬과정에서 발생한 학술과 정치상의 문제들과 논쟁에 관해서는 프로젝트 책임자 슈더의 논문 Theodor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8(1960) 참조.

42) Mathias Beer, “Die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Hintergründe - Entstehung - Ergebnis - Wirkung”,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50(1999), pp. 116-117.

43) Robert G. Moeller,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 84.

44) Alf Teichs, Otto Meissner (Producer) & Frank Wisbar (Director) (1960): *Nacht fiel über Gotenhafen* [Film]. Germany: Deutsche Film Hansa GmbH & Co.

집』도 참조하였다.⁴⁵⁾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는 구스틀로프함 침몰사건뿐만 아니라 동프로이센 주민들의 전반적인 피난 과정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의 잔학성과 복수심을 엿볼 수 있는 독일 민간인 사살 장면과 소련 작가 일리야 에렌부르크(Ilja Ehrenburg)의 ‘독일인을 살해하라’는 전쟁 프로파간다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반볼셰비즘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물론, 감독은 전쟁 중에도 살롱에서 유희를 즐기는 구스틀로프 선원들과 밀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연행되는 유대인을 대비시킴으로써 나치 범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영화의 이야기를 시종일관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피난과 배의 침몰 과정에서 고통 받으며 죽음에 이르는 독일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영화에서 일종의 ‘속죄양’의 역할로서 나치 정권과 남성들의 전쟁 책임을 대신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는 유대인 박해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자료집』의 한계를 일부 넘어섰지만, 어디까지나 소련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독일인들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의 ‘희생자성’을 드러내려 했던 『자료집』의 기본 서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IV. ‘능동적 희생자’로서의 실향민들

실향민들은 서독의 정당들과 정부가 부여한 ‘희생자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다. 당시 서독 내 실향민들의 두 이익단체인 피추방독일인중앙협회(Zentralverband vertriebener Deutscher)와 동부독일향우회연합(Vereinigte Ostdeutsche Landsmannschaften)의 대표들은 1950년 8월 5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 실향민 헌장(Chartha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을 발표하였다. 이 헌장에서 실향민들은 노골적인 ‘자기희생자화’를 시도하였다.

45) Michael Ennis, “Opfer und Täter in den Gustloff-Filmen von Frank Wisbar”, Bill Niven, ed., *Die “Wilhelm Gustloff”: Geschichte und Erinnerung eines Untergangs* (Halle: Mitteldeutscher Verlag, 2011), pp. 214-221; “Anti-Bolschewismus: Aus jenen Tagen”, *Der Spiegel*, 3(January 13, 1960), pp. 59-60.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상실했다. 고향이 없는 자들은 이 대지 위에서 이 방인이다. 신은 인간을 각자의 고향에 두었다. 강제로 인간을 고향에서 이 탈시키는 것은 그를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견뎌내고,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 부여한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고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현실화되도록 요구할 자격이 있음을 느끼는 바이다. … 세계의 인민들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고통의 당사자인 실향민들의 운명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⁴⁶⁾

실향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인권침해의 맥락에서 바라보았으며 스스로를 “지난 수년간 끔찍한 경험을 감당한” 가장 큰 규모의 집단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피난’과 ‘추방’에서 희생당한 독일인들의 숫자를, 『자료집』에서 제시한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 35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실향민들로서는 이러한 피해가 고향을 강제로 떠남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피해를 보상받는 길은 ‘실향민 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향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실향민 현장’ 발표 이후 피추방독일인중앙협회는 실향민들에게 천부인권이나 다름없었던 고향권이 1948년 12월 10일에 선포되었던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 권리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서 ‘선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향민들은 수동적인 희생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희생자성’을 ‘추방’과 ‘피난’의 기억 문화에서 관철시키려 하였다.⁴⁸⁾

46) Werner Blumenthal, ed., “Charta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Eine Dokumentation von Stellungnahmen, Reden und Entschließungen des Bundes der Vertriebenen – Vereinigte Landsmannschaften und Landesverbände. Teil 1: 1949–1972*,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4), pp. 17–18.

47) “Heimatrecht – Menschenrecht: Zum Tag der Menschenrechte”, *Vertriebenen-Korrespondenz*, 20(December 9. 1950), pp. 1–3.

48) Goschler, “‘Versöhnung’ und ‘Viktimisierung’”, p. 877.

『자료집』은 전반적으로는 실항민들의 ‘희생자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이 자료집 가운데 ‘자기희생자화’에 반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항민 단체들과 관련 언론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자료집』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쉬더에 따르면 별책으로 출판된 주데텐 독일인(Sudetendeutsche) 마가레테 쉘(Margarete Schell)의 일기와 본편 가운데 하나인 ‘헝가리’ 지역을 다룬 책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⁴⁹⁾ 전자에 대한 비판은 주데텐 독일인이 편집장으로 있던 실항민 전문 신문 『페어트리베넨-안차이거(Vertriebenen-Anzeiger)』⁵⁰⁾에 게재되었다. 그 주요 비판점은 쉘의 박해 경험이 주데텐 독일인의 ‘보편적이고도, 사실에 부합하는’ 희생서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주데텐 독일인들에게 그것은 마치 추방 당시의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였다. 쉘은 프라하 출신 배우이자 라디오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여성으로서 독일인 ‘희생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 당시 나치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소련군의 성범죄 내용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사실 그녀는 나치 당국으로부터 유대계라는 의심을 받으며 인종주의적인 차별을 당하며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도 있었다. 물론, 막상 소련군이 프라하를 점령하자 보복의 두려움을 느꼈고, 일종의 포로 생활을 하며 소련군 장교들의 허드렛일을 돕는데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녀는 러시아인들과 체코인들로부터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들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서술을 남겼다. 이 때문에 그녀의 일기는 반공주의적인 의도에서 “서독의 실항민들, 특히 프라하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을 멸시하려는 목적을 지닌 프라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물에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다.⁵¹⁾

49)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p. 14.

50) Tobias Weger, “Volkstumskampf” ohne Ende?: Sudetendeutsche Organisationen, 1945-1955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8), p. 604.

51) “Tagebuch einer Bevorzugten”, *Vertriebenen-Anzeiger*, 27(July 5, 1958), p. 3; *Ein Tagebuch aus Prag 1945-46, Aufzeichnungen von Margarete Schell*, p. 19; David Hertl, 2020, “Margarete Schellová popsala zážitky českých Němců po konci války”, <https://plus.rozhlas.cz/margarete-schellova-popsala-zazitky-ceskych-nemcu-po-konci->

『자료집』의 헝가리편과 관련된 논쟁에서 해당 지역 출신 독일인들은 그것이 나치 정권과 국외 독일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을 문제 삼았다.⁵²⁾ 이 때문에 헝가리 독일인 민족지학자 요한 바이드라인(Johann Weidlein)은 『자료집』이 “중요한 지점들에서 추방자의 입맛에 따라” 서술되었다며 헝가리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⁵³⁾ 그는 “헝가리 독일인 역사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상”을 전달할 목적으로 헝가리 독일인들과 나치 정권과의 관계를 다룬 자료집을 스스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바이드라인은 자료집 서두에서 1933년 직후 나치즘이 헝가리 독일인들에게 곧바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프란츠 안톤 바쉬(Franz Anton Basch)의 증언을 끌어들었다. 그런데 그는 나치 정권이 인정한 헝가리 독일인 민족지도자(Volksgruppenführer)이자 전후 헝가리에서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한 인물이었다.⁵⁴⁾ 바쉬에 따르면, 헝가리의 독일 소수 민족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독문학자 야콥 블라이어(Jacob Bleyer)는 히틀러 집권 이전부터 나치즘과 파시즘을 반대했다고 한다. 바쉬를 포함한 블라이어의 후계자들은 ‘헝가리 거주 독일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헝가리 협정 (Deutsch-ungarisches Protokoll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deutschen Volksgruppe in Ungarn)’이 체결된 1940년부터 비로소 민족의식(völkisches Bewusstsein)’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바이드라인은 이러한 바쉬의 증언을 신뢰하여 그가 당대에 나치를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변호하였다.⁵⁵⁾

valky-8198604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52)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p. 14.

53) “Es geht um die Dokumentation”, *Donauschwäbische Rundschau*, 11(March 16. 1958), p. 1.

54) Ladislaus Buzás, 1953, “Basch, Franz Anton”, <https://www.deutsche-biographie.de/sfz3516.html#ndbcontent>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55) Johann Weidlein, ed.,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Schorndorf: Selbstverlag des Herausgebers, 1958), pp. 6-8.

블라이어의 영향을 받아 도나우슈바벤 지역(donauschwäbische Siedlungsgebiete, 현재의 헝가리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일부)을 연구하던 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안톤 타페르너(Anton Tafferner)⁵⁶⁾는 바이드라인의 의견에 동조하여 해당 지역 독일인들은 나치 체제와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독일 본국을 위하여 국외에서 투쟁하고, 볼셰비즘과의 대결에도 가담했던 독일 소수 민족들에게 1940년에 맺어진 ‘독일-헝가리 협정’은 그동안 이어진 ‘끔찍한 부당함’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타페르너는 러시아인들보다 헝가리 민족주의자들이나 쇼비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드라인의 사료집을 근거로 하여 추방의 책임을 후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였다.⁵⁷⁾

이러한 논쟁 끝에 기민련-사민당 연립정부는 실향민 단체들의 불만을 수용하였고, 1969년 연방문서보관소(Bundesarchiv) 측에 추방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⁵⁸⁾ 이는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이 상당한 결실을 거둔 이후인 1974년에 완성되었는데,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 때문에 당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2년 10월 기민련-자민당 연립정부 출범과 함께 내무부 장관에 취임한 프리드리히 짐머만(Friedrich Zimmermann)은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겼고 12월에 그것을 대중에게 바로 공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재단법인 독일실향민문화재단(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의 주도 하에 이 보고서는 『추방과 추방범죄: 1945-1948(Vertreibung und Vertreibungsverbrechen: 1945-1948)』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⁵⁹⁾ 이 ‘보고서’는 앞서 출간된 『자료

56)“Tafferner, Anton”, <https://kulturportal-west-ost.eu/biographien/tafferner-anton-2>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57)Anton Tafferner,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Donauschwabe*, 36(September 6. 1959), p. 7.

58)Beer, “Die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pp. 114-115.

59)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ed., *Vertreibung und Ver-*

집』에서 제시한 과도한 희생자 수를 ‘교계실종자협회’의 그것으로 정정함으로써 통계적인 객관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실향민 단체들의 의도를 반영하듯이 오로지 소련군과 동유럽인들의 폭력·비인도주의적 행위와 실향민들의 피해규모에만 집중하였다. 게다가 추방지역에서의 소위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험담들을 주로 선택하였다.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 출신 소련군들이 본래의 기질과 심성으로 인해 야만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당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던 주장들이 보고서에서 그대로 채택되었다.⁶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보고서는 『자료집』에서 부족하나마 제시되었던 ‘추방’ 이전의 나치 과거사와 관련된 맥락과 쉐의 경험담과 같은 ‘특수한 사례’들을 배제함으로써 실향민들의 ‘자기희생자화’에 부합하는 온전한 ‘독일인 희생서사’를 제공하였다.

V. 결론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전범국’ 서독에서 독일인의 희생을 의미하는 ‘추방’과 ‘피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사회 전반에서 노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독의 주요 정당들은 ‘추방’이후 빈곤이란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실향민들이 전쟁 희생자라는 것에 초당파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독일인 희생자 담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게다가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 덕분에 실질적으로 ‘추방’에 가담한 서방 연합국들을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게만 그것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독일인들의 희생’을 강조할 수 있었다. 또한, 실향민들이 강제이주의 피해자임을 내세우는 것은 동방영토 수복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서독의 독

treibungsverbrechen 1945-1948: Bericht des Bundesarchivs vom 28. Mai 1974, Archivalien und ausgewählte Erlebnisberichte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9), pp. 9-10.

60)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Vertreibung und Vertriebensverbrechen 1945-1948*, pp. 17-22, pp. 25-26, p. 38.

일인 희생자 담론은 이러한 초당파적 합의에서 시작하여 정부와 실항민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항민 단체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기희생자화’ 전략에 반하는 기억들을 소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때문에 나치 과거사와 제2차 세계 대전 역사의 일부로서의 ‘추방’과 ‘피난’의 역사적 맥락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피해사실과 규모만 남게 되어 오히려 독일인 강제이주사의 전체적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실항민들의 배타적인 ‘자기희생자화’ 노력은 본질적으로 추방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의 전쟁 범죄와 그 책임을 상대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물론, 실항민 단체가 대부분 독점하다시피 한 독일인 희생자 담론은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 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체제가 붕괴된 이후 실항민 단체들의 총괄조직인 실항민연맹(Bund der Vertriebenen)은 홀로코스트 기억 문화 사업에 영감을 받아 2000년 강제추방반대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주도하에 ‘추방’과 ‘피난’을 공적으로 기억·추모하려 하였다.⁶¹⁾ 그러나 이러한 실항민연맹의 기념사업은 더 이상 동유럽 국가들을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맹의 의도대로 관철될 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된 전사회적인 논쟁과 문제들은 차후 논문에서 2000년대 이후의 ‘추방’과 ‘피난’의 기억 문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van101672@gmail.com

주제어(Key Words):

실항민(Vertriebene), 피난과 추방(Flucht und Vertreibung), 독일인 희생자 담론(deutscher Opferdiskurs), 자기희생자화(Selbstviktimisier-

61) Wolfgang Benz, 2008, “Zur Debatte: Flucht, Vertreibung, Versöhnung”,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geschichte-und-erinnerung/39826/flucht-vertreibung-versoehnung?p=all> (검색일: 2020년 3월 24일).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

ung), 반공주의(Antikommunismus)

투고일: 2021.03.31, 심사일: 2021.05.02,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초록>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Vertreibung und
Flucht)

: 독일인 희생자 담론과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신 정 훈

서독의 정치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Linie) 이동 지역에서 추방된 독일 실항민들을 전쟁의 희생자로 간주하였다. 강제이주의 책임은 연합국 전체에 있었지만 반공주의 논리에 의해 그것은 주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게 전가되었다. 서독 정부는 평화회의에서 연합국 측에 실항민들이 겪은 ‘피난(Flucht)’과 ‘추방(Vertreibung)’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피해사례를 수집·정리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출판된 『동·중부유럽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자료집(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은 서독 초기 독일인 희생서사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기희생자화’에 충실한 실항민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희생서사에 만족하지 않았고, 독일인 희생자 담론에 적극 개입하였다.

<Abstract>

West Germany’s Culture of “Flight” and “Expulsion” Remembrance:
Focusing on the German Victimhood Discourse and Anticomunism

Shin, Junghoon

West German politicians regarded Germans who were displaced from the east of the Oder-Neisse lin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victims of the war. All the Allies had the responsibility for this forced migration, but it was mainly passed on to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sense of anticommunism. In order to inform the Allies about the realities of the “Flight” and “expulsion” of the Germans at the peace conference, the West German government tried to collect and organize damage cases of the expellees. In this context, the Doc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leuropa was planned and published. It contributed to the framework of German sacrificial narratives at the beginning of West Germany. However, the expellee associations which were faithful to “self-victimizatio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acrificial narratives suggested by the government, and actively intervened in the German victimhood discourse.

참 고 문 헌

1. 사료

Blumenthal, Werner, e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Eine Dokumentation von Stellungnahmen, Reden und Entschließungen des Bundes der Vertriebenen – Vereinigte Landsmannschaften und Landesverbände. Teil 1: 1949–1972*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4).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n Gebieten östlich der Oder-Neiße*, Bd. I, 1–3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Ungarn*, Bd. II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Rumänien*, Bd. III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Bevölkerung aus der Tschechoslowakei*, Bd. IV, 1–2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Das Schicksal der Deutschen in Jugoslawien*, Bd. V (München: dtv, 1984).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ommern 1945–46, Aufzeichnungen von Käthe von Normann*, 1.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

digte, 1955).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Tagebuch aus Prag 1945-46, Aufzeichnungen von Margarete Schell*, 2.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57).

_____, ed.,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Ein Bericht aus Ost- und Westpreußen 1945-1947, Aufzeichnungen von Hans Graf von Lehndorff*, 3. Beiheft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60).

Judick, Günter, Schleifstein, Josef & Steinhaus, Kurt, eds., *KPD 1945-1968: Dokumente*, Bd. 1 (Neuss: Edition Marxische Blätter, 1989).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ed., *Vertreibung und Vertreibungsverbrechen 1945-1948: Bericht des Bundesarchivs vom 28. Mai 1974, Archivalien und ausgewählte Erlebnisberichte*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1989).

Plenarprotokolle des Bundestages

Potsdamer Abkommen (1945)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Parteitages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Weidlein, Johann, ed.,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Schorndorf: Selbstverlag des Herausgebers, 1958).

2. 단행본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Moeller, Robert G.,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Bade, Klaus J., Emmer, Pieter C., Lucassen, Leo & Oltmer, Jochen, eds., *Enzyklopädie Migration in Europa: Vom 17.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07).

Bauerkämper, Arnd, *Das umstrittene Gedächtnis: Die Erinnerung an Nationalsozialismus, Faschismus und Krieg in Europa seit 1945*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2).

Benz, Wolfgang, ed.,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Ursachen, Ereignisse, Folgen* (Frankfurt am Main: Fischer, 1988).

Douglas, R. M. & Richter, Martin (Übersetzer), *“Ordnungsgemäße Überführung”: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München: C.H.Beck, 2012).

Fischer, Wolfgang, *Heimat-Politiker?: Selbstverständnis und politisches Handeln von Vertriebenen als Abgeordnete im Deutschen Bundestag 1949-1974* (Düsseldorf: Droste, 2010).

Goschler, Constantin, *Wiedergutmachung: Westdeutschland und die Verfolgten des Nationalsozialismus 1945-1954* (München: Oldenbourg, 1992).

Kossert, Andreas, *Kalte Heimat: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Vertriebenen nach 1945* (München: Siedler, 2008).

Müller, Matthias, *Die SPD und die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7: Eintracht, Entfremdung, Zwietracht* (Berlin: Lit Verlag, 2012).

Stickler, Matthias, *“Ostdeutsch heißt Gesamtdeutsch”: Organisation, Selbstverständnis und heimatpolitische Zielsetzungen der deutschen Vertriebenenverbände 1949-1972* (Düsseldorf: Droste, 2004).

Schwartz, Michael, *Vertriebene und “Umsiedlerpolitik”: Integra-*

tionskonflikte in den 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en und die Assimilationsstrategien in der SBZ/DDR 1945-1961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4).

Weger, Tobias, “*Volkstumskampf*” ohne Ende?: *Sudetendeutsche Organisationen, 1945-1955*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8).

3. 논문

송충기, 「역사학과 과거청산: 나치시대 역사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구사학』, 제80권(2005).

Robert G. Moelller,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1-1(1996).

Axel Schildt, “Antikommunismus von Hitler zu Adenauer”, Frei, Norbert & Rigoll, Dominik, eds., *Der Antikommunismus in seiner Epoche: Weltanschauung und Politik in Deutschland, Europa und den USA* (Göttingen: Wallstein, 2017).

Bernd Faulenbach, “Flucht und Vertreibung in der individuell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Erinnerung”, *BIOS*, 21(2008).

Constantin Goschler, “‘Versöhnung’ und ‘Viktimisierung’: Die Vertriebenen und der deutsche Opferdiskurs”,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 53(2005).

Ingo Haar, “‘Bevölkerungsbilanzen’ und ‘Vertreibungsverluste’: Zur Wissenschaftsgeschichte der deutschen Opferangaben aus Flucht und Vertreibung”, Ehmer, Josef, Ferdinand, Ursula & Reulecke, Jürgen, eds., *Herausforderung Bevölkerung: Zu Entwicklungen des modernen Denkens über die Bevölkerung vor, im und nach dem “Dritten Reich”*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Mathias Beer, “Die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Hintergründe – Entstehung – Ergebnis – Wirkung”,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50(1999).

_____,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Zeitgeschichte: Das Großforschungsprojekt ‘Dokumentation der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Ost-Mitteleuropa’”,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46(1998).

Michael Ennis, “Opfer und Täter in den Gustloff-Filmen von Frank Wisbar”, Niven, Bill, ed., *Die “Wilhelm Gustloff”: Geschichte und Erinnerung eines Untergangs* (Halle: Mitteldeutscher Verlag, 2011).

Michael Schwartz, “Vertriebene im doppelten Deutschland: Integrations- und Erinnerungspolitik in der DDR und in der Bundesrepublik”,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6(2008).

Theodor Schieder,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als wissenschaftliches Problem”,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8(1960).

4. 웹사이트 (강연자료, 연설문, 전기)

“Tafferner, Anton”, <https://kulturportal-west-ost.eu/biographien/tafferner-anton-2>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Aleida Assmann, 2016, “Erinnerung an Flucht und Vertreib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uploads/2016/06/vortrag_aleida_assmann_heinrich-boell-stiftung_flucht_und_vertreibung.pdf (검색일: 2019년 8월 29일)

David Hertl, 2020, “Margarete Schellová popsala zážitky českých Němců po konci války”, <https://plus.rozhlas.cz/margarete-schellova-popsala-zazitky-ceskych-nemcu-po-konci-valky-8198604>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

Ladislaus Buzás, 1953, “Basch, Franz Anton”, <https://www.deutsche-biographie.de/sfz3516.html#ndbcontent> (검색일: 2021년 3월 22일)

Winston Churchill, 1946, “Churchill’s speech in Zurich”, https://www.churchill-in-zurich.ch/site/assets/files/1807/rede_winston_churchill_englisch.pdf (검색일: 2021년 1월 25일)

Wolfgang Benz, 2008, “Zur Debatte: Flucht, Vertreibung, Versöhnung”,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geschichte-und-erinnerung/39826/flucht-vertreibung-versoehnung?p=all> (검색일: 2020년 3월 24일)

5. 영화

Teichs, Alf, Meissner, Otto (Producer) & Wisbar, Frank (Director) (1960): *Nacht fiel über Gotenhafen* [Film]. Germany: Deutsche Film Hansa GmbH & Co.

6. 신문·잡지

“Anti-Bolschewismus: Aus jenen Tagen”, *Der Spiegel*, 3(January 13. 1960), pp. 59-60.

“Es geht um die Dokumentation”, *Donauschwäbische Rundschau*, 11(March 16.1958), p. 1.

“Heimatrecht - Menschenrecht: Zum Tag der Menschenrechte”, *Vertriebenen-Korrespondenz*, 20(December 9. 1950), pp. 1-3.

“Tagebuch einer Bevorzugten”, *Vertriebenen-Anzeiger*, 27(July 5. 1958), p. 3.

Anton Tafferner, “Geschichte der Ungarndeutschen in Dokumenten (1930-1950*)”, *Donauschwabe*, 36(September 6. 1959), p. 7.